

光州日那





음력 1월 23일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제21702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광주의 미래 100년 이끌 공약 경쟁 해달라"

광주시 요청 20개 대선 공약사업 중 민주 75%, 국힘은 40% 반영 국힘, 국비 지원 없는 '복합쇼핑몰 논쟁'으로 광주 민심 갈라치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 지만, 광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국비 예산 지원도 없는 소모적인 '복합 쇼핑몰 논쟁'만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관련기사 3면〉

대선에서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과 국 민의힘 모두 수도권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빛고 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사업과 미래형 친환경 공 기산업 등 광주지역 숙원사업 상당수를 대선공약 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와 인공지능 중심 도시 사업의 성패가 달린 '특별 법 제정' 공약 요청에 대해서도 양 당 모두 즉답을 회피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선 대선 공약 채택만이 차기 정부 국 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첫 시작점이라는 점에 서, 지역 숙원·현안사업이 최소한 유력 대선후보 공약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민주당,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 보측에 광주미래발전을 책임질 8대 분야, 20개 중점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

지난 15일 기준 민주당은 전체 20개 사업 중 75%인 15개 사업을, 국민의힘은 고작 40%에 불 과한 8개를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양당 모두 최종 공약을 사실상 확정하고 공약 집 초안을 마련중이며, 일부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광주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 중 양 당이 미반 영한 공약은 광주와 인근 도시 5곳을 묶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과 지능형 공기 신산업 특 화단지 조성, 국가김치문화산업단지 조성,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초지능형 스마트병원 구축, 광주 아시아 아트스퀘어(대규모 문화예술 회관) 조성 등 5개 사업이다.

양 당은 또 임기 중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 해결 을 위한 국가사업화 및 특별법 제정 요청에 대해서 도 '군공항 이전 적극 지원' (민주), '도심 광주공 항 이전'(국민의힘) 등 애매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광주·전남의 갈등 사업이기도한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이었음 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대 선에서도 구체적으로 공약 반영이 안될 경우 또 다 른 갈등만 낳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인공지능(AI) 대표도시인 광주시가 대한민 국 실리콘 밸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약 포함을 요청했지만, 양당 모두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산업인 AI산업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산업

에 맞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광주시

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 숙원사업인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광주시 의료원 설립,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호남에너 지밸리(RE300) 구축,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 조성, 민주인권기념파크 국가사업 등은 아예 공약에서 제외했다.

더 큰 문제는 대선공약에 포함되더라도, 집권정 당 성향 등에 따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과극' 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지 역 대선 공약 이행률은 80%대를 기록 중인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선 공약사업은 14.5%였다. 결국 대선 공약마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엔 차기 정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내 역량을 끌어 모아 미반영 사업을 반드시 공약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하지만, 양당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수천 억원, 수 조원대 국비 예산이 필요한 경제·생활 인프라 구축 관련 공약 등은 뒷전인 채 특정기업이 투자해 야 하는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에만 일주일 가까이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학 일주일 앞 … 초등학교 방역・소독

이를 바라보는 광주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지만, 양당의 소모적 경쟁은 이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한 카페 에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복합쇼핑몰 유치 공동 대응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언치 선거 대책위원회'는 동구 한 카페에서 복합쇼핑몰 건립 논쟁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 과 미국 실리콘밸리에 견줄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 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 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 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현 고2 대입부터 수시 학종에서 자기소개서 폐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 학 입시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 서가 폐지된다. 대학들은 모집인원 10%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고등교육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돼 다음달 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

개정된 시행령은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최소 10% 이상은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개정 고 등교육법은 모집정원의 15% 이내로 사회통합전 형을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쓸 수 있 는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성인 학습자의 대학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도 신설됐다. 단, 수도권에 서는 운영할 수 없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산업대 학, 기술대학 등에서 해당 정원 외 모집전형을 운 영할 수 있다.

대학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계획을 교육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한다는 조항도 새로 마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5 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각 기관장은 소관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꾸기 위해 서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 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장, 전 문가가 참여해 전체 정부 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실태조사와 성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학사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된 학과생이 다른 학 과로 소속을 바꿀 경우, 해당 학과 출신 학생이 대 학을 계속 다닐 동안은 그 정원을 따로 계산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혈세 추가 투입 우려 ▶6면



▶18면

국민의힘

KIA 연습경기, 주전경쟁 시작됐다

2022년도 1학기 개학을 일주일여 앞둔 22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북구청 방역반원들이 학생들 등교에 대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푸틴, 우크라 동부 독립승인 직후 군 진입명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평화 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2일(현지시 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광고주명:국민의험)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러시아 평화유 지군 진입을 명령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또 DPR, LPR 지도자들과 러시아·공화국들 간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에도 서명했다.

서명 후에는 국방장관에게 이들 두 공화국에 평 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영 토 내에 러시아군 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지난 2014 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이들 두 공화 국을 수립했다. 이후 이 지역에선 우크라이나 정

부군과 충돌이 이어졌고, 2015년 평화협정인 '민 스크 협정'으로 대규모 교전이 중단됐으나 8년째 산발적 교전은 계속됐다. 이번 독립 승인은 러시 아가 반군에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길을 연 것 이어서, 전운이 고조된 우크라이나에 전면적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키우는 결과가 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21 일(현지시간) 밤 긴급 소집됐다. /연합뉴스



